인사청문 나흘째…여야, 보고서 채택 놓고 공방

국힘, 장관 후보자 전원 채택 보류 방침

민주 "보고서·특정인 낙마 거래대상 아냐"

일부 후보 임명 놓고 대통령실·여권 고민

대화하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나흘째인 17일 여야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한 국회 보고서 채택을 보류키로 하고 청문회가 끝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장관 후보자 11명과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완료됐지만 여야 합의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것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 명뿐이다. 배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원내 전략이 확정되기 전에 채택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목표로 청문회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채택마저 일괄 거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전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보고서 채택과 특정 후보자의 낙마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정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향후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돼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을 통해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의 거센 사퇴 요구에 직면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강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여전하고 '병원 갑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오히려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 후보자에게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 등이 교육 수장으로서는 결격 사유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상황이다.

여권은 이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교육 수장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물음표다.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일부 후보자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언급과 여당의 기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일부 후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기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결국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명명한 만큼 여론을 도외시할 순 없지만 낙마가 현실화하면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임기 초반의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고민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요인이다.

여기에 강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제도 도입 후 첫 현역 의원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김진수 기자

정청래 "호남특별위원회 설치, 호남 목소리 반영"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강조

국립의대 설립·군공항 이전 약속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사진) 국회의원이 17일 "당내에 호남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호남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오늘 제헌절이 없었을 것"이라며 "헌법에 5·18 정신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호남 정신에 적극 동의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호남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당내 호남의 목소리가 제때, 제대로 담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를 통해 호남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 정치에 활기가 돌고 우수 인재를 더 많이 중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정 후보는 "당대표 직속으로 민원실장을 임명해 호남 민원이 바로바로 접수되고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공약이 달성되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호남발전특위에서 전남권 공공의대인 국립의대 설립을 전광석화처럼 빨리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현안도 6자 회담 TF가 꾸려져 있는 만큼 당 대표가 되면 최대한 협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물이 많은 곳은 샘을 파야 한다"며 "풍력과 태양광이 풍부한 전남에 육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면 어려움이 있어 바다에 케이블을 까는 방법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허브 전남이 실현되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金지사·도의회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양 안돼"

국민 건강·식량주권·농산업 보호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미국이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농업 분야 시장개방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미국의 부당한 농업 분야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 주식인 쌀마저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소는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검역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역시 생태계 교란 등 장기적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한 시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 산업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을 위한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정부에서도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정가 프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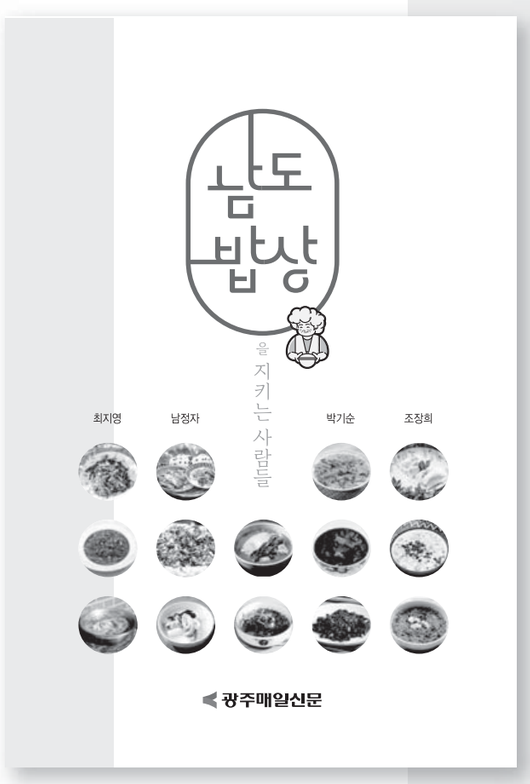
박지원 "달라진 대한민국 실감"

李대통령 "세월호 추모공간 정부가 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사진) 국회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존재 이유, 달라진 대한민국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16일) 이 대통령께서 참사 피해자 여러분들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며 "간담회에서 세월호 가족분들이 진도에 추모공간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해수부는 진도군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즉시 '왜 지자체에 넘기냐. 국가가 하라'고 지시했다"며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도 광주공항 무안 이전에 대해 대통령실에 TF를 구성,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김진수 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